

# 전남도, '국내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 박차

내년 상반기 정부 공모 '경쟁 치열' 높은 전력 자급률 등 최적지 부각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 등 병행 "균형발전·인구소멸 극복에 핵심"

전남도가 내년 상반기 예정된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를 앞두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분산에너지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지산지소(地産地消)를 기본 개념으로, 중앙집중적 에너지 수요공급망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에너지 분권'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분산에너지가 도입되면 에너지를 인근

수요처에 바로 공급해 소비시킴으로써 송전 비용을 낮추고, 분산에너지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여 신재생에너지 공급 여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분산에너지특별법에 근거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의 직접거래 등 혁신적 제도가 가능해진다. 점에서 '대한민국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지자체와 기업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전력 자급률이 높아 다양한 분산에너지 사업모델을 구현하는데 유리해 정부가 구상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롤모델이자 최적지로 손꼽힌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그동안 정부의 특별법 제정과 정책 수립 단계부터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 용역과 산학 협업을 통해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도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에는 선제적으로 분산에너지 연구에 착수해 전남의 다양한 에너지원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6개 시군 7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6월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국회 포럼'을 개최해 범정부 공감대를 확보했으며 지난 21일엔 도청서 '전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해 '전남형 분산특화지역 비즈니스 모델' 성공을 위한 각계 의견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이순형 동신대 교수는 현재 제시된 전남도의

특화지역 비즈니스 모델(안)은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하며 단순히 잉여 전력을 저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타 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김명도 한국에너지공단 팀장은 분산에너지 성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장치(ESS)의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세밀하게 설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창순 전남테크노파크 책임연구원은 전남이 강점을 가진 재생에너지 외에 수소, LNG, 바이오 등 다양한 에너지를 접목한 다변화된 분산에너지 모델을 제안했다. 이재형 목포대 교수는 '분산에너지특별법'에서 전력다소비 업종인 첨단산업을 전력계통영향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분산에너지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은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전남도는 충분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의 특화지역 공모에 맞춰 전남에 가장 많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최종 선정되도록 자질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강상구 전남도에너지산업국장은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분권 실현, 균형발전, 인구소멸 극복의 핵심 열쇠"라며 "내년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반드시 전남에 유치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을 통해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유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 김 지사, 핵심현안·국고확보 건의 광폭행보

이상민 장관·김민석 의원 등 면담 국립의대·SOC사업 등 지원 건의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허영 예결위 간사, 정태호·주철현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예산실 실국장 등을 잇따라 만나 지역 핵심현안과 국고 추가 확보를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이상민 장관에게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지난 22일 정부에 추천한 것을 설명하며, 2026학년도 국립의대 신설 및 정원 배정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국토 남해안 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중심이 되고 전남·경남·부산이 함께 참여하는 '남해안 종합개발' 설립과 근거법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조기 제정 필요성도 피력했다.

또한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 이비교유위 산업인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의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도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도 건의했다.

김민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과도 연쇄적으로 만나 지역 현안과 국고 추가 확보에 국회 차원의 협조를 바랐다.

또한 기재부 김동일 예산실장과 예산실 주요 국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국회 증액 대상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 SOC 사업 국고지원과 관련해 "지역 경제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SOC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사업비 배분이 필요하나 2024년 예산, 2025년 정부안의 경우 많이 부족하다"며 "지역 핵심사업을 계획기간에 완공하기 위해 사업비 1조 원 확보가 필요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00억원 이상 증액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동일 예산실장은 "전남 현안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회 예산심의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한 전남도는 2025년 국비 9조원 시대 정착을 목표로 김영록 지사를 중심으로 국회의장, 예결위원장 등 국회 지도부와 기재부 등을 연이어 만나 지역 현안 해결과 국고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8일 서울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전남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건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목포대-순천대, 대학통합 공동추진위 출범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대학통합 및 통합의대 논의가 본격화됐다.

28일 목포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대학통합 공동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대학통합 신청서 작성·제출을 위한 추진방향과 상

세일정 등을 논의했다.

공동추진위원회는 양 대학의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대학 주요 보직자 7명, 교수·직원·교과·학생 대표 1명씩으로 각 대학별 12명씩으로 구성됐다.

양 대학은 오는 2026년 3월 대학통합을

목표로 12월까지 교육부에 대학통합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학년도 통합의대 설립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 예비평가인증을 신청하는 등 차질 없는 대학통합과 통합의대 설립을 위해 함께 노력기로 했다.

오지현 기자

이제는 혼자서도 단단하게 떠나자

**JINAIR**

문의/예약 : 1522-1901

무안-도교 진에어(1) 정기편 취항 확정!

**도교온천여행 2박 3일**

**1인기준 699,000~**

\* 해당 상품은 출발일마다 요금이 상이합니다. ▶ 포함내역 : 항공 및 유류세TAX, 호텔(2인1실), 차량, 가이드, 일정상의 식사 및 관광지 입장료, 2억원 여행자보험 ▶ 쇼핑 : 1회 (면세점)  
▶ 불포함 내역 : 기사 & 가이드팁(1인 ¥3,000), 매니퍼, 싱글차지(2박/15만원), 국내수송, 기타개인경비, 여권(여권의 유효기간은 출발일 기준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종합여행업 기획여행신고(2억원) 100-000-2024 0474 4822 호 ▷ 관광사업자 등록 제2008-000001호 ▷ 사업자등록 410-81-73451 (주) 조이투어 ▷ 당사는 관광진흥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